

한-메콩(Mekong) 협력과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메콩지역 인구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백 용 훈**

국문초록

한-메콩 협력은 아세안 국가들 간의 개발격차를 축소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저개발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메콩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이다. 이 글은 한-메콩 협력 관계가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고 협력 파트너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정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한-메콩 미래협력 방향 중 <7대 신규 우선협력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부문을 순환이주의 개발적 차원에서 짚어본다. 이주 관련 개발 정책은 개별이주자의 미시적인 요인과 함께 송출국의 환경 등 거시적인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메콩 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은 메콩 5개국의 인구, 인적자원 지표, 이주 동향, 그리고 국가별 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등의 맥락에 부합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에서 일정기간 체류 중인 이주근로자의 교육이나 기술 습득이 메콩 5개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귀환 이주자들의 경제 및 사회 재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9S1A5C2A01080959).

**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임연구원, beakyh@hanmail.net

주제어: 이주, 개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한-메콩 협력, 인적자원개발

I. 서론

2019년 11월 27일에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과 메콩 유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정상들은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Mekong-Han River Declaration for Establishing Partnership for People, Prosperity and Peace)」을 채택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1/27). 한-메콩 협력은 2011년 외교장관급 회의로 시작했고 8년이 지나 2019년 처음 정상급으로 격상됐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017년 11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과 함께 선언한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메콩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와 이에 대한 메콩 국가들의 지지를 확인하며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자리였다.

한-메콩 협력은 한-아세안 협력의 큰 틀 하에 있는 소지역협력체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메콩 협력의 방향에는 신남방정책, 태국의 애크맥스(ACMECS), 아세안 연계성, 2016-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 개발격차(development gap)를 언급해왔다. 개발격차는 아세안 국가들 중 선발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과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간의 경제적 차이를 의미한다. 아세안 후발 4개국은 모두 메콩 유역 5개국에 포함된다. 즉, 한-메콩 협력은 아세안

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아세안의 노력에 호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저개발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백용훈 2020: 9-10).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선언 중 한-메콩 미래협력 방향에 관한 <7대 신규 우선협력분야>에는 인적자원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메콩 지역 출신 인구는 국내 체류 비중이 높고 5개국 모두 고용허가제의 대상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주 및 이민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대상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메콩 협력 관계가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고 인적자원개발 부문을 순환이주의 개발적 차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해 본다. 둘째,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이주 동향을 파악해 본다. 셋째,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측면에서 메콩 5개국별 인구, 인적자원 지표, 그리고 국가발전 수요 및 정책 방향 등을 살펴 본다. 지역적 맥락은 메콩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미시적 측면과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거시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수용국-송출국-이주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순환이주의 메커니즘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신남방정책으로 인하여 학문 영역에서 최근 한-아세안 및 한-메콩에 관한 다양한 연구논문이 생산되었지만 대다수가 경제와 국제관계 측면에 주목하거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대외정책과 신남방정책의 관계를 조망한 연구들로 편향되어 있다(심재희 2019; 우양호 2019; 유정호·이준엽. 2019; 은웅·정진섭 2019; 최재덕 2019; 한인택 2018).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국제이주,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그리고 이주근로자들의 귀환이주를 다룬 최근 연구가 있지만 메콩 국가들을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오윤아 외 2012; 김나경

· 임채완 2015; Oh 2014). 사람을 주제로 하여 한-아세안 이주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최근 연구논문(오정은 2019)이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현상에 따른 일반여권 사증면제의 안보위협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에 불과하다. 한편, 최근 발간된 연구보고서(조영희 외 2019)는 신남방정책을 이주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인적 이동의 문제가 한-아세안 관계 증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II.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논의와 지역적·맥락적 접근

1. 이주-개발의 연계성에 관한 기존 논의의 흐름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논의는 각 시기별로 주류 이론의 관점과 쟁점을 반영하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반복되어왔다(de Hass 2005, 2012; Castles 1993, 2009; McMichael 2012: 22-23; 신지원 2013; 조영희 2015; 이병하 2019). 1970년대 이전에는 개발경제학의 근대화 이론을 기반으로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즉, 후진국의 잉여 노동력이 선진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와 80년대 이주와 개발의 논의는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의 영향으로 인해 비관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주변부가 중심부에 의해 ‘종속(dependency)’되면서 지배하는 구조적 상황과 주변부 국가의 ‘저개발(underdevelopment)’이 불평등한 세계체제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이다. 저개발 송출국에서 젊고 생산성 높은 노동력의 유출, 특히 두뇌 유출(brain drain)의 문제가 부상하면서 국제이주의 효과성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이주가 송출국의 개발에 오히

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발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견해가 강해지기 시작했다(Miyagiwa 1991; Haque and Kim 1995; Koser and Salt 1997; Wong and Yip 1999).

1980년대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의는 긍정 혹은 부정론 중 어느 것이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주 혹(migration hump)’의 표현처럼 이주와 개발의 상관성은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는 급격히 증가했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지목하는 연구가 등장했다(Martin and Taylor 1996; Massey 1991; Olesen 2002). 특히, 드 하스(de Hass 2012)는 개도국의 개발에 있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구조적 제약들,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간과한 채 이주로 인한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이득에만 주목하고 이를 국가 개발과 연관지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 혹은 저개발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과 시장으로만 돌리는 기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보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주-개발의 연계성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신지원 2013: 7).

1990년대는 원조효과성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기 시작한다. 선진 공여국의 경제성장 악화로 인하여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신자유주의 담론이 담긴 워싱턴 컨센서스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개발은 국가의 공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노력으로 재규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등 국제 개발 이슈가 더욱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의 발달과 이민자들의 송금(remittance)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팽창하면서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논의는 다시 낙관적인 관점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Maimbo and Ratha 2005: 2, 22-23; 김영완·이병하 2013:

182).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이로 인한 경제 발전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이주를 증진시켰다는 주장이 근간이 되었다(Faini and Venturini 1994; Schiff 1994; Martin and Taylor 1996; Massey 1991: 23). 송금의 경우에는 경제적 송금뿐만 아니라 사회적 송금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이를 통해 국제이주가 개도국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기존에 송출국의 저개발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두뇌유출은 수용국에서 이주자들의 기술 습득 및 경험 축적이 오히려 본국 귀환 후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으로 대체되어 선진국(수용국)과 개발도상국(송출국) 간 이동이 인적자원개발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논의되었다(Aguinas and Newland 2012: 159; 신지원 2013: 6). 이에 따라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논의가 이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Betts 2011: 1-2).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부상하는 낙관론은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낙관론의 부활로 볼 수 있지만, 이주가 송출국의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면서도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려는 수렴적 관점으로 변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유형과 목적에 따라 이주가 송출국의 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이하다. 또한, 이주가 개발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개발의 결과가 또 다른 이주의 배출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 작용한다(조영희 2018).

드 하스(de Hass 2012)는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을 위한 보다 유익한 접근법은 이민자들이 고국에 계속 참여하고 돌아오고 순환하며 사회적 및 경제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순환이주(circular

migration)는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국가 간 인 구이동으로 유입국 내 일정기간 체류 후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다시 이주와 귀환을 반복하는 이주의 형태를 뜻한다. 기존 국제이주 흐름 을 지배했던 이주자의 귀환으로 이주의 주기가 완료되는 ‘일회성’ 단기이주에 비해 순환이주는 좀 더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Agunias and Newland 2007; Newland 2009: 2; Wickramasekara 2011: 83; 신지원 2013 재인용). 뉴랜드(Newland 2009: 9)는 순환이주 개념을 공간적 차원(spatial dimension), 시간적 차원(temporal dimension), 반복적 차원(iterative dimension), 개발적 차원(developmental dimension)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개발적 차원은 수용국과 송출국 모두 순환이주를 통해 이익을 도모 하는 것으로 이주당사자의 경우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과 연 관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상품, 자본, 그리고 사람의 이동이 세계화 현상을 촉진시켰지만, 사람의 이동을 의미하는 이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상품이나 자 본의 이동에 해당하는 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다(이 병하 2019). 국제이주의 맥락에는 안보, 문화, 경제적 이익, 노동시장 정책 등 국내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혼재 해 있기 때문이다(Martin 2015; Tuccio 2017; Hollifield 2018: 158). 따라서 이주 관련 협력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 면, 수용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할 경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수용국 국민들의 일 자리 부족이 이주민들의 유입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가 커질 수 있으 며, 이주민의 사회통합이 실패할 경우 잠재적 갈등이 동반되는 집단 정체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송영훈 2016; 오정은 2019). 하지만, 앞선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이주당사 자의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증가 등 이주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평가를 간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논의는 선진국(수용국)과 개발도상국(송출국)이 연계되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신뢰와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2. 지역적 맥락에서 본 이주-개발 연계성과 한-메콩 협력

한-메콩 협력의 틀 속에서 순환이주와 인간개발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메콩 협력은 한-아세안 협력의 큰 틀 하에서 그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¹⁾ 한-아세안 협력 사업은 25주년을 기념하는 제2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2014년)에서 채택된 <한-아세안 행동계획(2016-2020)>에 따라 정치안보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연계성, 지역 및 국제분야 협력,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와 개발격차 축소, 그리고 하위지역협력 등 총 7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다. 한-메콩 협력은 이 분야들 가운데 연계성 증진,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와 개발격차 축소, 그리고 하위지역협력 등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구체화한 것이다(최경희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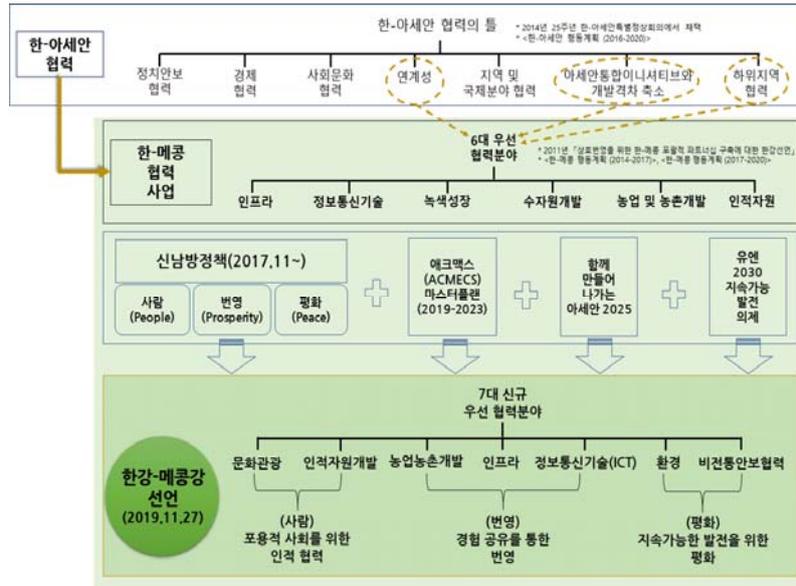
아세안 내에서는 선발 6개국과 후발 4개국 간 개발격차 축소와 역내 균형 발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아세안이 직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 아세안의 노력에 호응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아세안의 저개발 국가들이 집중되어 있는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 기초하여 2010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한국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제안

1) 아래의 내용은 <그림 1>에 정리하였음.

했고, 아세안측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2011년 1차부터 2018년 8차까지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 장관 회의에서 「상호번영을 위한 한-메콩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 선언」(이하 2011년 한강선언)을 채택하여 한강의 기적처럼 메콩강의 기적을 만들자는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외교부 2011). 한국은 2011년 메콩 5개국과의 한강 선언을 토대로 수립된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과 <한-메콩 행동계획(2017-2020)>을 이행해오고 있다.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인적자원 등 6대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한-메콩 미래협력 방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 태국의 애크맥스(ACEMECS) 마스터플랜(2019-2023), 아세안 2025,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됐다. 특히, 신남방정책의 사람, 번영, 평화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적 협력’,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라는 틀 속에서 협력을 지속하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관련된 신규 7대 우선협력분야는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으로 재조정됐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 기존 6대 분야 중 녹색성장과 수자원개발이 환경 분야로 통합되었고, 문화·관광과 비전통안보협력 분야가 새롭게 등장했다. 인적자원개발은 2014년 이후 계속해서 우선협력분야로 포함되어 있고 2019년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적 협력으로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졌다.

<그림 1> 한-아세안 협력 중 한-메콩 협력사업, 그리고 한강-메콩강 선언



자료: 백용훈 (2020: 10).

<그림 1>에서 보여주듯이 한강-메콩강 선언의 협력 분야 중 인적 자원개발은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한 인적 협력의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포용적 사회란 다양성을 전제로 하며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 즉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러한 인재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 구성원들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메콩 개별 국가의 개발전략과 함께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 및 경력개발에서 얼마나 포용적 기회를 가지는가가 중요할 것이며, 생애 발달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발이 얼마나 충족되

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측면에서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적 협력에 기초한 인적자원개발의 의미를 고려해볼 때 한-메콩 협력은 송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관한 이해와 이를 토대로 수립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용국에서 이주근로자의 교육이나 기술 습득이 본국 귀환 후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적으로는 송출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충분한 고려와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지역적 맥락을 무시한 개발 협력은 송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시키는 등 악순환의 구조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McMichael 2012: 174-176).

이를 위하여 우선 인구·사회의 변화에 관한 지표에 관한 파악과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한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메콩 출신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별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이고 인적자본 관련 지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메콩 5개국의 인구구조는 인적자원의 공급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구규모라고 하더라도 연령별, 성별, 학력별 구성에 따라 인적자원 공급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개별 국가로부터 해외로 이주하는 인구 규모와 함께 한국으로의 송출 이주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파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인적자원개발에서 인적자원 수요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인력이 양성되고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함께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별 사회경제발전계획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Ⅲ. 메콩(Mekong) 5개국 출신 인구의 국내 체류 현황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메콩 국가들의 구체적인 지표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이주 동향과 그 특징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순환이주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단기 및 장기간 체류하는 메콩 5개국 출신의 인구는 결혼이민자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일정기간 거주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집단에 해당하고 이들 중 일부는 잠재된 순환이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전년대비 6.6% 증가한 2,524,656명이다. 이 가운데 아세안 10개국 출신 체류외국인은 전체 체류외국인 중 25.6%인 647,460명이고 아세안 출신 중 메콩 5개국 출신은 79.2%인 513,109명이다. 메콩 5개국 중에서도 베트남과 태국 출신이 약 84%를 차지한다. 베트남인이 224,518명(메콩 5개국 중 43.8%, 아세안 출신 중 34.7%, 전체 체류외국인 중 8.9%), 태국인이 209,909명(메콩 5개국 중 40.9%, 아세안 중 32.7, 전체 체류외국인 중 8.3%)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표 1> 메콩 5개국 출신 인구의 국내 체류 동향(2014-2019)

(단위: 명)

국적/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메콩 5개국	캄보디아	38,395	43,209	45,832	47,105	47,012	47,565
	라오스	8988	1,004	1,146	1,221	1,568	1,823
	미얀마	15,921	19,209	22,455	24,902	28,074	29,294
	태국	94,314	93,348	100,860	153,259	197,764	209,909
	베트남	129,973	136,758	149,384	169,738	196,633	224,518
	총계	287,591	293,528	319,677	396,225	471,051	513,109

자료: 조영희 외(2019) 및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1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1. 단기 체류 현황

체류외국인의 유형은 크게 90일을 기준으로 단기 체류와 장기 체류로 구분한다. 이 중 단기체류는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을 의미한다.²⁾ 2019년 말 기준 단기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아세안 출신의 사람들은 256,180명이고 전체 단기체류외국인(792,853명) 중 32.3%를 차지한다. 아세안 중 메콩 5개국 출신은 83.1%인 212,849명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이 176,48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33,103명이다. 메콩 5개국 출신 단기체류외국인은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태국인이 2016년 이후 급증했다.

<표 2> 메콩 5개국 출신 인구의 국내 단기체류 동향(2014-2019)

(단위: 명)

국적/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메콩 5개국	캄보디아	548	609	581	754	1,037	1,308
	라오스	457	501	581	603	762	774
	미얀마	735	659	636	650	730	1,179
	태국	66,873	64,836	70,535	122,356	165,437	176,485
	베트남	5,855	7,063	8,359	14,394	21,670	33,103
	소계	74,468	73,668	80,692	138,757	189,636	212,849

자료: 조영희 외(2019)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2014~2019)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 단기체류외국인 자격에는 유학(D-2),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도 해당되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에서 제시하는 통계에서 해당 자격별 단기체류 외국인을 통계로 선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개 자격에 대해서만 정리하였다.

단기체류 외국인인 등록 및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민 정책 측면에서는 사증제도 편의성 문제(비자간소화나 무비자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집단에 해당한다. 1980년대 초에 한국은 아세안 4개국, 즉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 중 메콩 5개국에 포함되는 태국의 경우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 규모는 17만 명 이상으로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한다. 베트남 국민들은 주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고 있다.

<표 3> 메콩 5개국 출신 인구의 국내 단기체류 자격별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국적/자격	합계	사증면제 (B-1)	관광통과 (B-2)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단기취업 (C-4)	
메콩 5개국	캄보디아	1,308	60	92	0	1,130	26
	라오스	774	0	30	0	738	6
	미얀마	1,179	2	394	0	783	0
	태국	176,485	176,322	127	0	23	13
	베트남	33,103	78	1,176	1	31,531	317
	총계	212,849	176,462	1,819	1	34,205	362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1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 장기 체류 현황

장기체류는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의미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혹은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 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에 해당한다. 2019년 12월 말 기준 한

국 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731,803명이다. 메콩 5개국 출신 장기체류외국인은 크게 노동이주(전문취업/단순기능취업), 결혼이주(결혼이민자), 그리고 유학이주(유학)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노동이주는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된다. 전문인력의 자격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등이고, 단순기능인력의 자격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취업자격을 가진 한국 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565,616명이다. 이 가운데 메콩 5개국 출신은 24.3%인 137,617명이고, 전문인력이 3,196명, 단순기능인력이 134,421명이다.

<표 4> 메콩 5개국 출신 인구의 취업자격별 국내 체류 동향(2014~2019)
(단위: 명)

국적/ 연도·업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문	단순 기능	전문	단순 기능	전문	단순 기능	전문	단순 기능	전문	단순 기능	전문	단순 기능	
메 콩 5 개 국	캄보디아	23	31,057	32	35,410	40	37,745	56	38,798	53	39,197	61	37,980
	라오스	18	0	11	0	15	0	15	0	15	133	18	288
	미얀마	28	14,229	38	17,475	44	20,571	44	22,827	46	25,667	52	26,080
	태국	523	23,080	638	23,732	658	24,695	604	24,838	567	25,243	554	25,402
	베트남	926	54,492	1,186	49,963	1,535	46,643	1,929	45,725	2,130	45,659	2,511	44,671
총계	1,518	122,858	1,905	126,580	2,292	129,654	2,648	132,188	2,811	135,899	3,196	134,421	

자료: 조영희 외(2019)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통계월보(2014 ~ 2019.1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국적별 전문인력은 베트남이 2,511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88.7%는 특정활동(E-7)³⁾의 자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특정활동에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이 해당한다.

라오스를 제외한 4개국의 국내 체류 단순기능인력 인구는 13만 명 이상이다. 국적별 단순기능인력은 베트남이 44,671명, 캄보디아 37,980명, 미얀마 26,080명, 태국 25,402명 순이다. 대다수는 비전문 취업(E-9)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선원취업(E-10)의 자격이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12).

다음으로, 결혼이주는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F-2-1, F-5-2, F-6)의 자격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매달 법무부가 제공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의 결혼이민(F-6) 자격의 수치로만 한정하였다. 2005년 이후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수가 급증하여 당시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자 위주에서 다양화되었다(Nguyen 2017: 36-37). 2019년 12월 말 기준 한국 내 결혼이민자는 131,034명이고, 이 중 메콩 5개국 출신은 39.2%인 51,323명으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한국계 포함 41,613명, 전체 중 31.8%)보다 더 많다. 특히,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41,772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중 가장 많은 비중(31.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태국 4,495명, 캄보디아 4,428명 순이다.

<표 5> 메콩 5개국 출신 결혼이민자(F-6)의 국내 체류 동향(2014-2019)
(단위: 명)

국가/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메콩 5개국	캄보디아	4,215	4,206	4,182	4,202	4,259	4,428
	라오스	258	295	328	358	382	432
	미얀마	85	115	135	143	163	196
	태국	2,010	2,167	2,544	3,027	3,771	4,495
	베트남	36,199	37,680	38,866	39,464	39,876	41,772
	소계	42,767	44,463	46,055	47,194	48,451	51,323

자료: 조영희 외(2019)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아세안 국가 출신 이주자의 또 다른 주요 유형은 유학이주이며, 그 유형은 유학 자격 비자(D-2, D-4-1, D-4-7) 소지자의 규모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180,131명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2월호). 이 가운데 메콩 5개국 출신 유학생은 33.2%인 59,731명이다. 특히, 베트남 유학생은 57,539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31.9%에 해당하며 중국 유학생(39.8%)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유학생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만 명 이상 급증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유학생(D-4-1 자격)이 68%를 차지한다. 미얀마 유학생은 2019년 말 기준 1,020명으로 2016년 이후 연평균 170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표 6> 메콩 5개국 출신 유학생의 국내 체류 동향(2014-2019)

(단위: 명)

국가/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메콩 5개국	캄보디아	351	418	415	404	408	429
	라오스	94	109	112	113	105	120
	미얀마	338	414	495	614	790	1,020
	태국	422	493	595	571	623	623
	베트남	5,177	7,445	15,193	27,563	45,143	57,539
	소계	6,382	8,879	16,810	29,265	47,069	59,731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및 정보공개 요청 자료(공개일시: 2020.3.9.)
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주: 유학(D-2),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 합산

<표 7> 주요 메콩 국가 출신 유학생의 자격별 체류 현황

(2019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국적/자격	총 계	유학 (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미얀마	1,020	684	336	0
베트남	57,539	18,337	39,196	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12)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IV. 메콩 5개국의 사회경제적 특징: 인적자원개발 관련 지표 및 국가별 정책을 중심으로

순환이주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주의 흐름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앞서 단기 및 장기 체류 현황의 통계 자료에서 드러나듯이 한국과 메콩 유역 5개국 간의 인간 이동(human mobility)의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단기체류의 경우 태국 국민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단기체류외국인 중 메콩 5개국 출신의 인구는 20.3%를 차지하고, 장기체류의 경우 노동시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취업자격을 가진 메콩 5개국 출신의 인구는 전체 중 24.3%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의 메콩 출신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순환이주와 인적자원개발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 즉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직업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신지원 2013).

이에 대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용국 사회 내에서 이주근로자가 불법체류자, 경제적 낙후 지역 혹은 국가 출신이라는 낙인 등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송출국의 인적

자원과 국가개발을 위한 수요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송출국의 수요에 기반한 인적자원개발의 기회가 제한되고 이주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결여되는 문제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메콩 협력에서 순환이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끌어내고 인적자원개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메콩 5개국의 인구학적 특성과 인적자원 관련 지표, 국가별 이주 현황 및 사회경제개발 계획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한국의 전략적 접근, 즉 제도 마련 및 이행이 중요하다.

1. 국가별 인구학적 특성 및 인적자원 관련 지표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메콩 국가들 중 베트남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약 9천8백만 명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태국이 약 6천9백만 명 그리고 미얀마가 약 5천6백만 명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인구는 각각 1천7백만 명과 7백만 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이주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구 구성이 보다 중요한 변수이다. 국가별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유사하지만 태국은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태국의 경우 25세-54세 이하의 인구가 약 4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면 다른 국가와 유사하지만, 24세 이하의 인구가 다른 네 국가에 비해 적으며 55세 이상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태국은 0-14세, 15-24세, 55-64세, 65세 이상의 인구가 모두 1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4개국에 비해 노동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표 8> 국가별 인구학적 특성

(2020년 예측치 기준)

	총인구수 (명)	인구 구성(%)					중위 연령 (세)	성비 (남성/ 여성)
		0- 14세	15- 24세	25- 54세	55- 64세	65세 이상		
캄보디아	16,926,984	30.18	17.28	41.51	6.44	4.59	26.4	0.95
라오스	7,447,396	31.25	20.60	38.29	5.73	4.13	24.0	0.99
미얀마	56,590,071	25.97	17.00	42.76	8.22	6.04	29.2	0.97
태국	68,977,400	16.45	13.02	45.69	13.01	11.82	39.0	0.96
베트남	98,721,275	22.61	15.22	45.70	9.55	6.91	31.9	1.01

출처: CIA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검색일: 2020.3.6.).

국가별 인적자원의 특성과 함께 개발 수요는 평균 학업연한,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노동력 참가율, 노동력 중 숙련노동 비율 등에 관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균 학업연한의 경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베트남, 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여성의 평균 학업연한이 가장 낮다.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25세 이상)의 경우 베트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캄보디아 여성의 비중이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노동 참가율의 경우 미얀마와 태국 여성을 제외하면 모두 높은 수준이다. 즉,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 노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력 중 숙련노동 비율의 경우 라오스, 태국, 베트남은 30% 이상인 반면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각각 14%와 18% 수준이다.

<표 9> 인적자원 관련 지표

(2018년 기준, 숙련노동 비율은 해당년도 기준)

	평균 학업연한 (년)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 25세 이상)		노동력 참가율 (%, 15세 이상)		숙련노동 비율 (노동력 중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캄보디아	5.7	4.1	28.1	15.1	81.4	75.2	13.5 [2016]
라오스	5.6	4.8	45.2	35.0	79.7	76.8	34.2 [2017]
미얀마	4.9	5.0	22.3	28.7	77.3	47.7	17.5 [2017]
태국	8.0	7.5	47.5	43.1	76.2	59.5	38.0 [2018]
베트남	8.5	7.9	77.7	66.2	82.5	72.7	32.3 [2017]

출처: 유엔개발계획(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KHM>, 검색일: 2020.3.6.).

2. 메콩 유역 국가별 이주 현황

아세안 인구의 국제 이동은 최근 수십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했고, 2015년 말 자유로운 인적 및 물적 이동을 위한 아세안공동체 설립 이후 지속 증가해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 간의 이주는 목적지 경제, 즉 수용국에서의 높은 임금과 이주 사회 네트워크의 발달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송출국 경제침체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uccio 2017). 아래 <표 10>은 메콩 5개국의 아세안 내 국가 간 이동과 아세안과 전세계 주요 국가 간 이동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아세안 내 이주 현황을 살펴보면, 태국을 제외한 메콩 4개국은 유입 대비 송출 인구가 많고 그 중에서도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계 국가로 확대하더라도 태국은 여전히 유입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입 대비 송출 인구의 비율이 큰 국가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국가별 이주 양상

(단위: 명, %)

	아세안내(Intra-ASEAN)			전체(Total Migration)		
	송출 (Outward)	유입 (Inward)	송출/유입 (Ratio)	송출 (Outward)	유입 (Inward)	송출/유입 (Ratio)
아세안	7,321,653	7,321,653	-	21,537,460	11,484,963	1.88
캄보디아	773,428	70,280	11.00	1,114,226	76,333	14.60
라오스	934,263	26,994	34.61	1,292,295	45,489	28.41
미얀마	2,155,907	-	-	2,947,287	103,380	28.51
태국	209,650	3,560,999	0.06	993,253	4,438,567	0.22
베트남	164,422	44,122	3.73	2,694,270	103,464	26.04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Bilateral Estimates of Migrant Stocks in 2017을 기초로
필자 직접 계산

아래 <표 11>은 이 가운데 메콩 5개국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로의 송출 인구를 정리한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경우 한국으로의 송출인구는 아세안(10), 미국, EU(28)에 비해 적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경우 태국으로의 송출 인구가 6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13.7%), 프랑스(5.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3%로 8위 수준이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으로의 송출 인구가 전체 중 50.2%이고, 호주 8.8%, 캐나다 7.1% 순이다. 한국은 4.5%로 5위 수준이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의 송출 인구 규모는 일본에 비해서는 많지만 아세안, 미국, EU(28)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의 송출 인구가 62.3%이고 말레이시아 10.5%, 사우디아라비아 8.2% 수준이며, 한국은 0.2%로 12위 수준이다.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송출 인구 규모는 미국, EU(28), 아세안, 일본보다는 적고 중국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출 인구가 25.5%, 말레이시아 9.4%, 호주 7.3%이며 한국

은 3.5%로 8위 수준이다. 끝으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의 송출 인구는 태국 71.7%, 미국 14.2%, 방글라데시 7.0%이다.

<표 11> 메콩 5개국에서 주요 국가로의 송출 인구

(단위: 명, %)

	세계 (명)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10)		미국		EU(28)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캄보디아	1,114,226	14,550	1.3	464	0.0	3,518	0.3	773,428	69.4	152,415	13.7	73,960	6.6
라오스	1,292,295	0	0.0	1,373	0.1	0	0.0	934,263	72.3	183,894	14.2	50,466	3.9
미얀마	2,947,287	4,748	0.2	39,776	1.3	99	0.0	2,155,907	73.1	142,494	4.8	20,607	0.7
태국	993,253	34,372	3.5	23,357	2.4	47,047	4.7	209,650	21.1	253,585	25.5	227,846	22.9
베트남	2,694,270	122,449	4.5	36,205	1.3	82,482	3.1	164,422	6.1	1,352,760	50.2	402,809	15.0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Bilateral Estimates of Migrant Stocks in 2017.

3. 메콩 5개국별 주요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과 인적자원개발 관련 내용

이주를 통한 개발의 선순환적 효과를 위하여 본 연구는 메콩 5개국별 주요 사회경제발전계획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보는 송출국의 거시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산업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수요를 파악하고 노동시장의 특성과 변화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국가발전전략은 사각 전략(Rectangular Strategy)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 고용, 공평, 효율을 위한 사각 전략: 캄보디아 비전 2050 실현을 향한 기반의 조성(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Building the Foundation Toward Realizing the Cambodia Vision 2050)」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 IV(2019-2023)을 발표하였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8/9). 이 가운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략은 교육 및 과학기술의 질 향상, 기술훈련, 공중보건 및 영양 그리고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 가지 이상 기술을 가진 청년 양성”의 컨셉에 따라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교육, 외국어교육, 교육과학센터를 통한 STEM 교육 강화, 평생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 중이다.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중간 및 고급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며 기술훈련센터의 실질 수요에 맞는 인재교육능력을 강화하여 수요에 맞는 기술 인력을 배출하고자 한다.

2015-2025 캄보디아 산업개발정책(IDP)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노동집약에서 기술주도 산업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운아·김미림, 2017: 6). 2019-2023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9-2023은 ICT 및 현대 농업 및 산업 응용 분야에서 근로자와 사람의 기술적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강조한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Ministry of Planning, 2018/5). 이주근로자의 수는 2008년 5만 명에서 2017년 115만 명으로 증가했다. 캄보디아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이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오스의 대표적인 개발관련 계획은 제8차 경제사회개발계획(8th NSEDP: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이다(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6). 라오스 역시 노동숙련도가 낮아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에 있다. 라오스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향상된 과학기술 사용, 소기업 및 중소기업 역량과 경쟁력 향상, 업무의 편의성 향상, 농업에서 더 높은 생산성 산업 및 서비스 부문으로 노동 이동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공공 및 민간 노동력에 이미 진입한 혹은 진입하는 사람들의 교육 및 훈련 수준

향상, 소도시의 경제적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관리 강화, 지역통합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인적자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자영업과 신규 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건설, 자동차 정비공, 전기, 토목, 광물, 지리공학 분야에서의 인력 양성, 비즈니스 관리자, 재무 관리자, 경제학자 및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양성, 그리고 가공 산업, 수공예 및 국가 고유성을 대표하는 현지 전통 제품의 중소기업을 위한 역량 구축 등이다(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6: 118).

미얀마 정부는 2018년 8월에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2018-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 중 인간과 세상(People & Planet)의 축에서 21세기 사회를 위한 인적자원 및 사회발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목표는 현대적인 선진 경제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진하고 직업 교육 및 훈련을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양질의 평생교육기회(lifelong educational opportunities)에 대한 공평한 접근 개선, 수요 주도적인 직업훈련(demand-driven TVET) 과정과 양질의 3차 교육 기회를 포함하여 직업 관련 교육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18/8). 미얀마는 신정부 발족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하여 경제특구개발과 물류환경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인구는 2차, 3차 교육 등록 비율이 49%로 주변 동남아 국가들(인도네시아 76%, 인도 76%, 베트남 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의 평균 근속 기간 역시 4년(말레이시아는 9.5년, 필리핀 8.9년, 중국 7.5년)에 불과하다.

태국 정부는 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ESDP)에서 R&D 부문에 대한 투자와 인적 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

로 채택하고 있다(Office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Thailand 2017). 앞서 태국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태국 정부는 고령화 사회를 향한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 따라 모든 연령 및 계층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적 자원의 질과 관련하여 태국 정부는 ① 유아기(early childhood stage)에 어린 아이들이 적절하게 개발되지 않았고 ② 학령기 아동(School age children)의 성과가 좋지 않았고 ③ 노동인구(workforce)의 경우 이론적 지식과 기술이 부족했고 기술 불일치의 문제를 만들었으며 ④ 고령자(the elderly)의 경우 건강 상태가 나빴고 보다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력 계획(flagship projects, 2017-2021)을 제시했다. 유아기 아동 개발(Early Childhood Development), 가족 웰빙 강화 및 가족 강화 프로그램(Family Well-being Enhancement and Family Strengthening Program), 총체적 건강 위험 행동 감고 캠페인(Holistic Health Risk Behavior Reduction Campaign), 평생 학습 진흥 프로그램을 위한 노동 훈련 센터 개선(Labor Training Center Improvement for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rogram),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환경 구축(Environments Building Conducive to Lifelong Learning Program) 등이다.

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연평균 성장률은 2000년대 4.6%, 2010년대 2.9%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다. 태국 정부는 첨단기술 부재, R&D 투자 부진, 숙련 노동자 부족,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상실을 중진국 함정의 원인으로 분석하였고, 'Thailand 4.0'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태국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의 아세안

생산 허브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이다.

베트남은 매 5년 마다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을 통해 지난 5년 계획의 평가 및 향후 5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왔다. SEDP 2016-2020에 따르면, 정부는 2011-2015 SEDP에서 인적 자원의 질적 제고가 매우 낮았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시장경제제도와 인적자원 및 인프라의 질이 국가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07년부터 시작된 황금 인구구조(golden population structure)가 2041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예측에 따라 근로자의 자질 향상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산업화와 현대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적 자원, 특히 우수한 인적 자원을 “신속히” 개발하고 국가 교육 시스템의 포괄적인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6).

특히, 정부는 인적 자원개발과 과학 기술의 적용, 즉 직업훈련을 기업 및 생산 부문의 노동 수요와 연계시키는 작업이 국가 장기 발전 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동력의 질 향상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① 직업 교육에서 전문 지식 강화 ②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실용적 기술 지향적인 인력 교육 ③ 학부 교육 기관을 연구 중심 기관, 응용 지향 기관, 실무 중심 기관으로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학부 교육 개발 등을 강조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베트남 산업 발전 전략 및 2035년 비전(879/Qd-TTg)에 따르면, 베트남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 분야는 가공 및 제조(기계 및 연금, 화학물질, 농림수산물 가공, 섬유 및 가죽), 전자 및 원거리 통신,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등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공 및 생산 과정의 국제 표준 적용과 베트남 농산품의 상표 제작을, 제조업 부문 중 섬유·봉제 및 가죽 신발 분야는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원부자

재 생산과 유행의류 및 고급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 분야는 전자 및 원거리 통신 부문, 특히 컴퓨터, 전화 부품 설비,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통신 기술 서비스 및 전자의료 분야이다(백용훈 2017).

<표 12> 메콩 5개국별 사회경제발전 주요 정책 중 인적자원개발 관련 내용

국가	주요 발전계획 • 인적자원개발 관련 내용
캄보디아	사각전략 IV(Rectangular Strategy IV), 2019-2023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 ICT 및 현대 농업 및 산업 응용 분야에서 기술력 증진과 노동생산성 향상
라오스	2016-2020 제8차 사회경제개발계획(NSEDP) • 노동숙련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 및 기술개발 훈련, 건축/건설, 자동차 정비, 전기, 토목, 광물, 지리공학 분야, 경제경영, 변호사 등 전문직 양성, 전통 수공예품을 역량 구축
미얀마	2018-2030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 수요 주도적인 직업훈련 과정과 양질의 3차 교육 등 직업 관련 교육 강화 필요성 인식
태국	2017-2021 경제사회개발계획(NESDP) • 자동차, 전기전자 산업 등 R&D 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베트남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 기업 및 생산 부문의 노동 수요와 연계된 근로자의 자질 향상 및 기술 습득을 통한 신속한 인적자원 개발, 가공 및 제조, 전자 및 원거리 통신,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등 분야

자료: 국가별 사회경제발전전략 및 계획을 바탕으로 필자 정리.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 글은 한-메콩 협력 관계가 정상회의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고 한-메콩 미래협력 방향 중 <7대 신규 우선협력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인적자원개발 부문을 순환이주의 개발적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메콩 이주 동향에 관한 통계와 함께 메콩 지역의 맥락, 즉 메콩 5개국의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원 관련 지표, 송출인구의 비중, 그리고 국가별 개발계획 및 산업정책 등을 검토해보았다.

한-메콩 협력에서 인간 중심의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가치의 관점에서 다양성의 수용을 통한 상호 간 파트너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한-메콩 협력 중 인적자원개발은 이상과 같은 메콩 지역의 맥락에 부합하는 한국 정부의 전략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송출국의 국가 및 개인의 거시 및 미시적인 특성과 함께 한국에서 일정기간 체류 중인 이주근로자의 교육이나 기술 습득이 메콩 5개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본국 귀환 이후 이들이 경제 및 사회적으로 재통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와 이를 통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

인력송출 정책과 이와 관련된 제도적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메콩 5개국은 경제발전 단계,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메콩 국가들 간의 단기 및 장기 체류 동향에 관한 지표를 살펴보면 비록 현재는 베트남과 태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메콩 유역의 산업발전과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로부터 한국의 송출 인구는 일정한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베트남과

태국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학적 특성과 무사증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메콩 5개국 중 태국과 다른 4개국의 이주를 통한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인적자원 관련 지표에서 평균학업 연한과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 그리고 숙련노동 비율을 고려하면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한국과 베트남의 직업교육기관 간 국제기술 교육교류, 그리고 최근 대학교육협회가 시행하는 아세안 석사학위교원 장학사업 등은 모두 좋은 취지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이행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현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훈련과 대학교육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본국귀환 후 개인의 사회재통합 및 송출국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나경 · 임채완. 2015. “베트남 귀환이주자의 인적 자본과 취업의 상관성 연구: 한국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5(1): 201-234.
- 김영완, 이병하. 2013. “공적개발원조가 외국인 노동자 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 25(4): 181-208.
- 백용훈. 2017. “AEC 출범 이후 베트남 경제의 기회와 도전.” 『국제지역연구』 21(4): 101-124.
- 백용훈. 2020.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메콩 협력의 의미와 평가.” 『웹진 서강동연: 한-아세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사회문화 지식 기반구축』 1: 9-17.
- 송영훈. 2016.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담론201』 19(3): 55-82.
- 신지원. 2013.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 담론에 대한 재고찰.” 『국제 · 지역연구』 22(4): 1-34.
- 심재희. 2019. “한국과 신남방국가 간 무역결합도 분석.” 『인문사회 21』 10(6): 943-956.
- 오윤아 · 김미림. 2017. 『캄보디아의 수출다변화 추진정책과 과제』 KIEP 기초자료 17-08(2017.12.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윤아 · 허재준 · 강대창 · 김유미 · 신민금. 2012.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2-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우양호. 2019. “동아시아 해역공동체를 향한 ‘신남방정책’의 의미와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2): 135-175.
- 유정호 · 이준엽. 2019. “한 · 중 부가가치 무역구조 측면에서의 신남방정책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17(3): 89-110.

- 은응·정진섭. 2019. “신남방정책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무역연구』 15(6): 331-349.
- 이병하. 2019.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 2.0의 등장: GCM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31(4): 5-34.
- 조영희. 2015. “국제이주와 개발: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의 형성과 이민정책의 변화.” 『국제정치연구』 18(1): 151-174.
- 조영희. 2018. 『글로벌이주거버넌스를 통해 본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논의를 중심으로』.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조영희·최경희·백용훈·이민구. 2019. 『신남방정책과 한국 아세안 이민협력』.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9-09. 이민정책연구원.
- 최경희·김태윤·백용훈·엄은희·이준표. 2018. 『신남방정책·한-아세안관계 30주년,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의 합의 및 전략: 3P 속의 7대 우선분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연구팀 2018년 외교부 정책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최재덕. 2019.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연계 모색: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7(4): 321-356.
- 한인택. 2018. “신남방정책: 필요성과 방안.” JPI Research Series 43: 208-213.
- Agunias, Dovelyn Rannveig and Kathleen Newland. 2007. “Circular Migration and Development: Trends, Policy Routes and Ways Forward.” *MPI Policy Brief*. April 2007. http://www.migrationpolicy.org/pubs/MigDevPB_041807.pdf.

- Agunias, Doreen Rannveig and Kathleen Newland. 2012. *Developing a Road Map for Engaging Diasporas in Development*. IOM & MPI: Geneva.
- Betts, Alexander. 2011. *Global Migration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stles, S and M. J. Miller. 1993. *The Age of Migration*. Basingstoke: Macmillan.
- Castles, Stephen. 2009. "Development and Migration - Migration and Development: What Comes First? Global Perspective and African Experiences" *Theoria: A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56(121): 1-31.
- de Hass, Hein. 2005. "International Migration, Remittances and Development: Myths and Facts." *Third World Quarterly* 26(8): 1269-1284.
- de Hass, Hein. 2012. "The Migration and Development Pendulum: A Critical View on Research and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50(3): 8-25.
- Faini, R. and A. Venturini. 1994. *Migration and Growth: The Experience of Southern Europe*. London: CEPR.
- Haque, N.U. and S.J. Kim. 1995. "Human Capital Flight: Impact of Migration on Income and Growth." *IMF Staff Papers* 42(3): 577-607.
- Hollifield, James F. 2018. "The Challenge of Migration Governance." In Christian Echele, Patrick Rueppel, Megha Sarmah, and Yeo Lay Hwee, eds. *Multilateralism in a Changing World Order*. Singapore: Konrad-Adenauer Stiftung.
- Koser, Khalid and John Salt. 1997. "The Geography of Highly Skilled

-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 283-303.
- Maimbo, Samuel Munzele and Dilip Ratha (Eds.). 2005. *Remittances: Development Impact and Future Prosp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 Martin, P. L. and J. E. Taylor. 1996. “The Anatomy of a Migration Hump.” in: JE Taylor (ed), *Development Strategy, Employment, and Migration: Insights from Models*. 43-62. Paris: OECD Development Centre.
- Martin, Sarah F. 2015.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Global Summitry* 1(1): 64-83.
- Massey, D. S. 1991.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Sergio Diaz-briquets and Sidney Weintraub (eds), *Determinants of Migration from Mexico,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Pp. 13-47. Boulder, CO: Westview.
- McMichael, Philip. 2012.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 Global Perspective*, 5th Edition. Sage Publication, Inc.
- Miyagiwa, K. 1991. “Scale Economies in Education and the Brain Drain Problem.”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2(3): 743-59.
- Newland, Kathleen. 2009. *Circular Migration and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Research Paper 2009/42. New York: UNDP.
- Nguyen, Hong-Xoan. 2017. “International Migration for Marriage from Vietnam to South Korea: Adaptation Challenges and Responses.”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1(1): 33-48.

- Oh, Yoon Ah. 2014.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conomic Assessments in the Philippines." 『동남아시아연구』 24(4): 33-62.
- Olesen, H. 2002. "Migration, Return and Development: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40(5): 125-150.
- Schiff, M. 1994. *How Trade, Aid, and Remittances Affect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376. Washington, DC: World Bank.
- Tuccio, Michele. 2017. "Determinants of Intra-ASEAN Migration." *Asian Development Review* 34(1): 144-166.
- Wickramasekara, Piyasiri. 2011. *Circular Migration: A Triple Win or a Dead End*. Global Union Research Network. ILO Discussion Paper No.15.
- Wong, K.Y. and C.K. Yip. 1999. "Education, Economic Growth, and Brain Drain."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23(5-6): 699-7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1/27. "[전문]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6946&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11-27&endDate=2019-11-27&srchWord=&cateId> (검색일: 2019/12/20).
- 외교부. "상호번영을 위한 한-메콩간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한강선언." 2011/10/28.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36399&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

- 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 2019/12/2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jc1MkZhcjRjbExpc3QuZG8lM0ZwYXNzd29yZCUzRCUyNnJnc0JnbmRIU3RyJTNEJTI2YmJzQ2xTZXEIM0QlMjZyZ3NFbmRkZVN0ciUzRCUyNmlzVmllld01pbmUIM0RmYWxzZSUyNn> (검색일: 2020/2/15).
- CIA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검색일: 2020/3/6).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2016/6.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 - 2020).” (http://www.la.one.un.org/images/publications/8th_NSEDP_2016-2020.pdf, 검색일: 2020/3/6).
- Office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Thailand. 2017. “THE TWELFTH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7-2021).” (http://www.nesdb.go.th/nesdb_en/ewt_w3c/ewt_dl_link.php?nid=4345, 검색일: 2020/3/10).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8/9. “Rectangular Strategy IV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Building the Foundation Toward Realizing the Cambodia Vision 2050.” <http://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19010204273578&rs=/viewer/result/202003>, 검색일: 2020/3/10)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Ministry of Planning. 2018/5. “Guideline for formulating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 Plan(NSDP) 2019-2023.” https://ncsd.moe.gov.kh/sites/default/files/2019-08/Guideline_for_NSdp_2019_2023_Preparation_2018_En.pdf, 검색일: 2020/3/10).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6.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http://pubdocs.worldbank.org/en/839361477533488479/Vietnam-SEDP-2016-2020.pdf>, 검색일: 2020/3/10).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018/8.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2018-2030).” (http://themimu.info/sites/themimu.info/files/documents/Core_Doc_Myanmar_Sustainable_Development_Plan_2018_-_2030_Aug2018.pdf, 검색일: 2020/3/10).
- UNDP. 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 The Real Wealth of Nations: Pathways to Human Development.”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reports/270/hdr_2010_en_complete_reprint.pdf (검색일: 2020/3/17).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KHM>, 검색일: 2020/3/6).
- World Bank. “Bilateral Estimates of Migrant Stocks in 2017.” <https://www.worldbank.org/en/topic/migrationremittancesdiasporaissues/brief/migration-remittances-data> (2020/2/17).

(2020.03.19. 투고, 2020.04.01. 심사, 2020.04.20. 게재확정)

<Abstract>

The Mekong-ROK Cooperation and the
Migration and Development Nexus:
Focusing on Developing Human Resources in
the Mekong Region

BEAK Yong Hun
(Sogang University)

The Mekong countries are key regions to reduce the development gap in ASEAN, as well as areas with great potential for growth, and major cooperation partners in pursuing the New Southern Policy. This paper focuses on the 1st Mekong-ROK Summit and highlights the need for a strategic approach by Korean governmen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artner countrie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cluded in <7 New Priority Cooperation Sectors> based on a contextual approach of the Mekong region and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It is important for development policies to take into account macro factors such as the environment of the origin country and micro factors of individual migrants in order to enable the triple-win solution for both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as well as for the migrants themselves. In terms of the migration and development nexus considering the regional contex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n appropriate way based on the population, human resource indicators, migration trends,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industrial policies and so 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education or skill acquisition of temporary migrants staying in Korea conforms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s of each countries in the Mekong region, and whether it can positively affect the economic and social reintegration of returning migrants.

Key Words: Migration, Development, Cambodia, Laos, Myanmar, Thailand, Vietnam, the Mekong-ROK Cooper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